

#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 주요이슈 및 쟁점 분석

김성웅\*

디지털화로 인한 기회와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활발한 국제 논의를 선도하고 있는 G20은 2017년부터 매년 디지털경제 분야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있다. 올해도 G20은 디지털경제 주요 관심사에 대한 논의를 위해 세 번째 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를 통해 회원국들은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인간중심의 인공지능, 거버넌스 혁신, 디지털경제의 보안, 지속가능개발 및 포용 등 디지털경제 분야의 핵심이슈를 논의하고 동시에 무역과 디지털경제의 접점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무역 및 디지털경제 장관 공동선언문과 AI 원칙을 담은 부속서를 채택하였다.

그간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는 데이터 이동과 신뢰, 디지털 격차 해소와 포용성, 신기술의 활용, 보안, 디지털 정부와 혁신, 디지털 무역 등 다양한 디지털경제 이슈를 논의해왔는 바, 이에 본고는 이러한 흐름에 초점을 맞춰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의 배경 및 2019년 장관회의 추진경과와 논의 결과인 선언문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사항을 이전 장관회의의 쟁점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 의의와 시사점을 모색해본다.

## 목 차

- I. 서론 / 2
- II.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 개요 / 4
  - 1. 배경 / 4
  - 2. 추진경과 / 5
- III. 2019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 결과 / 9
  - 1. 특징 / 9
  - 2. 장관선언문 세부내용 / 11

- IV.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 주요 이슈 및 쟁점 / 18
  - 1.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 19
  - 2. 디지털격차 해소 및 포용 / 21
  - 3. 신기술 활용 / 23
  - 4. 보안 및 신뢰 / 25
  - 5. 기타 / 26
- V. 결론 및 제언 / 28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부연구위원, (043)531-4436

## I. 서론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초연결 사회 및 디지털 사회가 도래하면서 전세계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7년 기준 29조 달러에 이르렀다. 이는 전년대비 13% 확대된 것이며, 온라인 쇼핑 이용자수도 전년대비 12% 뛰어 세계 인구의 1/4인 13억에 도달하는 등 최근 가파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sup>1)</sup> 중국과<sup>2)</sup> 미국이 전세계 국가중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도 전체 전자상거래 규모 및 B2B 부문에서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sup>3)</sup> 글로벌 디지털 무역의 증가는 무역비용을 절감시키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재화가 탄생하여 국제적으로 거래됨으로써 경제성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sup>4)</sup> 동시에 디지털 무역의 확산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처럼 무역 보복 및 국가별로 보호무역조치를 초래하는 문제도 발생시키고 있다.

이같은 디지털화로 인한 혜택과 그 이면에 존재하는 우려 및 과제를 인식한 국가들은 국가를 넘어서는 디지털 전환의 글로벌 확산적인 성격에 따라 혜택 극대화 및 과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국제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UN, OECD, ITU 등의 포괄적인 국제기구 이외에 APEC, ASEAN 등 지역협력체에서도 그 논의의 중심에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이슈와 의제를 담고 있다.

최근 이러한 논의를 선도하고 있는 국제논의체가 바로 G20이다. G20은 그 구성 자체가 선진국과 경제발전 신흥개도국으로 이뤄져있어<sup>5)</sup>, 디지털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디지털화로 인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모색하는 국제포라로서 장점을 갖고 있다. 실제로

1) UNCTAD(2019)

2) 2017년 중국 전자상거래 총액은 전년대비 11.7% 증가했고, B2C 매출과 소비자수 모두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디지털 무역의 리더로 도약함(2017년 세계 전자상거래 보고, 유산산(2018)).

3) 한국은 전체 규모 1조2900억 달러로 5위, B2B 1조 2200 억 달러로 4위를 차지하였으나, 국경간 B2C 판매 부문은 9위(30억 달러)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 UNCTAD(2019)

4) 허난이(2019)

5) 선진 7개국 정상회담(G7)과 유럽연합(EU) 의장국 그리고 신흥시장 12개국 등 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 네이버지식백과.

2016년부터 디지털경제 협력 논의를 시작하여 2017년을 기점으로 매년 디지털경제 분야 장관회의 개최<sup>6)</sup> 및 장관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디지털경제 관련 정책 이슈에 대한 논의를 강화 및 확장해가고 있다.<sup>7)</sup>

올해 6월 일본 츠쿠바에서 개최된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는 세 번째 장관회의로서 그간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이슈와 함께 기존 이슈를 좀더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주제도 담고 있어, 주요 쟁점 사항을 이전 장관회의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회원국들의 강조사항과 G20 내에서의 결과물의 흐름을 파악해볼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인간중심의 미래 사회라는 화두 아래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인간중심의 인공지능, 거버넌스 혁신, 디지털 보안, 지속가능개발목표 및 포용 등의 세션별 하위주제를 담고, G20 AI 원칙을 부속서로 한 장관선언문이 채택되었다. 특히, 올해는 무역과 디지털경제의 관계성에 주목하고 무역 파트와 공동으로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선언문을 도출함으로써 그 외연이 더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8)</sup> 이러한 장관회의 결과는 연이어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었는데, 동 장관회의에 대한 세부내용 파악의 필요성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2019년 G20 디지털경제장관회의를 주관하는 디지털경제 태스크포스와 장관회의의 전체적인 배경과 경과를 살펴보고, 금번 G20 장관회의의 주요 결과인 장관선언문의 구조적 특징과 내용을 분석한다. 또한 장관선언문 성안과정에서 드러났던

6) 2017년 1차 디지털경제 장관회의는 독일 뒤셀도르프, 2018년 2차 장관회의는 아르헨티나 살타, 2019년 3차 장관회의는 일본 츠쿠바에서 개최

7) G20 회의는 회원국, 파트너 초청국, 국제기구 등이 참석하는데, 2019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 및 TF회의는 이전 회의에 비해 참여국가가 대폭 확대됨(2018년 초청국 3개국에서 2019년 10개국으로 확대)

8) 장관선언문의 명칭도 G20 Ministerial Statement on Trade and Digital Economy로 변화함

9) 2019 디지털경제 장관선언문의 내용은 2019 오사카 정상선언문의 본문 파트 중 ‘견고한 글로벌 경제 성장 촉진(Fostering Robust Global Economic Growth)’ 부분에 ‘혁신: 디지털화,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 이동(Innovation: Digitalization, Data Free Flow with Trust)’ 단락으로 반영이 되었고, 장관선언문 자체는 정상선언문의 부속서로도 채택되었다. G20 Osaka Leaders’ Declaration(29 June 2019), para.10~12.

주요 쟁점을 2017년과 2018년 디지털경제태스크포스 및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G20내 디지털경제 논의의 핵심을 파악하고 향후 우리측의 G20 대응방안 및 연구방향을 모색해본다.

## II.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 개요

### 1. 배경

2017년 처음 시작된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는 2016년 G20 항저우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발족한 디지털경제 태스크포스(Digital Economy TaskForce, 이하 디지털경제 TF)를 통해 추진되어 왔다.<sup>10)</sup> 디지털경제 TF는 장관회의의 결과물인 장관선언문 합의 및 도출을 위한 이른바 장관회의의 사전 실무회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7년 독일 뒤셀도르프 장관회의를 시작으로 장관회의 준비를 위한 디지털경제 TF회의 및 장관회의 자체는 의장국과 부의장국들로 구성된 트로이카 협력체제를 통해 이뤄진다. 당해년도 개최국이 의장국이 되며 이전년도 개최국 및 다음년도 개최예정국이 각각 부의장국을 담당함으로써, 디지털경제 이슈가 지속 논의되어 장관회의 수준으로 이어지고 이를 준비하는 TF의 원활한 업무 이행과 개최국간 협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2019년 일본 츠쿠바 디지털경제 장관회의도 의장국 일본과 2018년 개최국인 아르헨티나 2020년 개최예정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부의장국이 협력하여 준비작업과 의제 논의를 진행해갔다.

특히, 이러한 트로이카 체제를 통해 이전년도 장관회의의 결과물인 장관선언문이 의미 없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관련된 이슈가 지속 논의되고 새롭게 부상하는 이슈가 채택되어 논의될 수 있도록 선언문 마무리에 향후계획(work forward)을 포함시켜 현

10) 2016년 의장국인 중국은 핵심의제 중 성장을 위한 신활로 개척과 관련하여, 혁신, 디지털경제, 신산업혁명을 세부이슈로 도입하고, 2016년 1월 G20 회원국 정부관계자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각 이슈별 TF를 구성. 김성용(2017), pp.4~5.

의장국이 인계할만하고 차기 의장국이 계획 가능한 이슈를 넣어 다음 장관회의에 후속조치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2017년 장관선언문에서는 디지털 변혁이 가져오는 경제성장 및 사회복지를 위한 잠재력을 인식하여 G20 디지털경제 TF의 지속적인 업무를 요청하고, 이에 차기 의장국 아르헨티나는 포용적 성장 및 고용 지원, 지속가능한 개발, 디지털격차 해소와 같은 로드맵을 기반으로 업무를 지속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sup>11)</sup> 또한, 2018년 장관선언문에서도 인공지능 및 ICT 활용상 보안, 디지털경제 측정, 변화하는 디지털정부, 개발을 위한 디지털인프라 촉진, 디지털화 관련 경험에 대한 정보공유 활성화 등의 업무를 지속할 의사를 밝힌 차기 의장국 일본의 계획을 환영하고, 특히 디지털경제와 무역간 접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디지털경제 TF가 G20 무역 및 투자 작업반(TIWG)과 협업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sup>12)</sup> 실제로 2019년 장관선언문의 내용과 방향이 이러한 2018년 장관선언문의 향후계획 부문을 따름으로써, 이어지는 장관선언문이 전년도 장관선언문의 후속조치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 2. 추진경과

2019년에 진행된 4차례의 TF회의와 회기간 진행된 화상회의를 통해 추진경과를 살펴본다. 1월 30일~31일 도쿄에서 열린 1차회의는 의장국 일본이 이슈노트와 토의문건에서 사전에 제시한 핵심 이슈 및 목표에 맞게 개별 세션을 통해 장관회의에서 담고자 하는 주요 뼈대를 검토하는 회의였다. 일본은 세션1에 신뢰에 기반한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세션2는 SDG 및 인프라, 세션3은 인간중심의 AI, 세션4는 거버넌스 혁신, 세션5는 포용, 세션6은 디지털사회를 위한 보안 등을 제안하여 구성하였다. 회원국들의 논의 결과 1차회의 논의내용을 근거로 2월~3월중 선언문의 중점포인트 및 초안을 의장국이 마련하기로 하였다.<sup>13)</sup> 이에따라 일본은 1차 TF회의 이후 준비작업을 통해 3월 5일 화상회의를 열고

11) G20 Digital Economy Ministerial Declaration(7 April 2017), para.33.

12) G20 Digital Economy Ministerial Declaration(24 Aug 2018), p 7.

디지털경제 장관선언문 아웃라인을 소개하고 회원국들의 피드백을 받았다.

2차회의(3.18~19, 도쿄)는 장관선언문 아웃라인에서 제시한 핵심 이슈 및 내용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 우선, 1차 회의의 6개 세션에서 SDG와 포용을 통합하여 총 5개 세션으로 변경하고,<sup>14)</sup> 세션별로 의장개회 및 관련발표, 회원국 논의로 진행하였다. 2차 회의는 1차 회의 이후 화상회의를 통해 정리 및 제안된 장관선언문의 아웃라인 토의 및 추후 초안 도출을 위한 회의의 성격으로 인해 회원국들의 본격적인 주장 대립도 관찰되었다. 회원국들은 데이터의 개념과 범위, 보안에 대한 접근과 격차에 대한 인식 등에 있어 이견을 공유하였다. 결론적으로 G20은 2차 회의 이후 회원국 의견을 모아 정리 작업 후 회람하고 이에 대해 장관선언문 초안을 작성하기로 하였다.<sup>15)</sup> 그리고, 의장국은 2차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4월 23일 화상회의를 진행하여 디지털경제 장관선언문 초안을 제시하고 회원국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3차회의(5.8~9, 츠쿠바)는 화상회의 이후 회원국들이 제시한 서면의견을 고려하여 작성한 장관선언문 수정안에 대해 최종적인 쟁점을 검토하였다. 인간중심의 AI와 관련, OECD AI 원칙을 부속서에 그대로 넣을지 여부가 주요 논의사항이었으며, 다수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의 개념에 대한 논쟁도 진행되었다. 신뢰에 기반한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세션은 논쟁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부문으로, 데이터(data) 대신 기존 장관선언문에서 합의된 것처럼 정보, 아이디어 및 지식(information, ideas and knowledge)을 사용할지 여부, 국내법 존중과 관련하여 적용가능한 프레임워크(applicable framework)를 넣을지 여부가 주로 논의되었다. 또한 거버넌스 혁신과 관련, 다수의 회원국은 '규제 샌드박스의 활용'이라는 문구의 추가를 제안하며 동 세션의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지속가능개발목표 및 포용 세션에서는 의장국이 제시한 스마트시티에 관한 내용에 다수의 회원국은 이의를 제기했으며, 장관회의까지 시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하여 SDGs 달성을 위한

13) 2019년 G20 디지털경제TF 1차회의 결과.

14) 세션1(신뢰에 기반한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세션2(인간중심의 AI), 세션3(거버넌스 혁신), 세션4(보안), 세션5(SDGs 및 포용)이며, 동 세션구성은 장관선언문 최종본까지 유지됨.

15) 2019년 G20 디지털경제TF 2차회의 결과.

디지털 액션플랜에 관한 내용 포함 여부를 재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3차 회의에서는 디지털경제무역 장관선언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담기위해 최초로 무역투자워킹그룹(Trade Investment Working Group, 이하 TIWG)과의 공동세션을 진행하였다. 다수의 회원국이 전자상거래에 관한 WTO 규칙 및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6월 7일 4차 TF 회의시에 예정된 2차 공동세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sup>16)</sup>

마지막으로 4차 TF회의(6.7, 츠쿠바)는 장관회의 바로 전날 장관선언문의 최종문안을 합의하기 위한 성격으로 개최되어 회원국간 이견 및 쟁점을 정리하였고, 밤샘 논의를 통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장관회의 본회의 세션 도중에 선언문 최종문안을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TIWG와의 2차 공동세션에서는 무역규범 도출에 민감한 국가들의 입장을 반영해 WTO 전자상거래 규칙을 담은 내용을 삭제하였으나, 디지털 상품 및 온라인 교역을 포함한 무역 규범 등 디지털경제와 무역의 접점으로서 현재 화두인 이슈들에 대해 논의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언문 공동 파트를 합의하였다.<sup>17)</sup>

〈표 1〉 2019 G20 디지털경제TF 논의경과 및 내용

차수	일정/개최지	특징	주요 쟁점
1차	2019.1.30.-31 일본 도쿄	본문 6개 주제분야 제안	주제분야의 범위 및 세부내용
2차	2019.3.18.-19 일본 도쿄	본문 5개 분야로 통합 축소	information vs data, 데이터의 범위, 국가별 법규를 인정 범위, AI 협업할 국제기구 범위, 액션플랜의 재정적 부담, 이니셔티브의 범위, 스마트시티 포함 수준
3차	2019.5.8.-9 일본 츠쿠바	선언문 초안 본격 논의 및 무역 파트 공동 논의 시작	다수이해관계자 개념, data의 정의 및 국내법 존중 수준, 디지털 액션플랜 세부내용 및 스마트시티 포함 여부
4차	2019.6.7 일본 츠쿠바	선언문 최종안 및 부속서 합의	데이터 이동과 국내법 존중, OECD AI 원칙 반영 범위, 디지털보안 부속서 포함, 스마트시티 반영 내용

자료: 2019년 디지털경제TF 결과 재정리

16) 2019년 G20 디지털경제TF 3차회의 결과.

17) 2019년 G20 디지털경제TF 4차회의 결과.

주요 쟁점으로 제시되었던 데이터의 이동에 따른 문제, OECD AI 원칙의 인용 문제, 다수 이해관계자 참여, 디지털경제의 보안 및 부속서 문제 등은 서로 대립된 의견을 주장한 국가들 간에 절충수준에서 합의가 완료되었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관련, 국내법을 존중하는 데이터 이동 및 데이터 이동에 따른 도전과제에 데이터 소유권 추가 등을 주장하는 국가들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수용해 국내법을 존중하는 데이터 이동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절충하여 합의하였고, 사람중심의 AI는 OECD AI 원칙의 본문 반영 및 정부 정책 가이드라인 추가 여부에 대해 의견이 대립하였으나, AI 원칙을 본문에 '인용' 및 정책 가이드라인을 '주목(take note of)'한다는 표현으로 완화하여 합의를 이뤘다. 거버넌스 혁신 이슈논의에서는 정책 수립 시 '다수 이해관계자의 참여'라는 표현에 '이해관계자들의 고유 역할 인정(respective roles)'을 추가하였고, 디지털경제에서의 보안과 관련, 회원국들은 'ICT에서의 보안' 고수 입장, '다수 이해관계자 접근'이라는 표현과 디지털 보안에 관한 공동 이해 및 국제협력의 내용을 담은 부속서 포함 여부 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려하여, 디지털경제의 보안을 유지하고 부속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절충하여 합의하였다.<sup>18)</sup> 2017년 및 2018년 장관회의시 TF회의에 비해 2019년은 4차례의 TF회의, 3차례의 화상회의 등 가장 길고 많은 준비과정을 거쳤으나, 최종 TF회의에서 쉽게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은 회의 운영의 효율성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동시에 열띤 논의 과정에서 이전 장관회의에 비해 더욱 심화된 논의를 통해 좀더 세부적인 이슈를 선언문에 답할 수 있었던 회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18) 2019년 G20 디지털경제TF 4차회의 결과.



### Ⅲ. 2019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 결과

#### 1. 특징

2019년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는 G20 회원국 및 초청국의 무역 및 디지털경제 분야 장관관 이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아태전기통신협 의체(APT),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도 옵저버로 참석하였다.<sup>19)</sup> 이번 장관 회의는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이 각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자유무역을 촉진시켜 세계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사회적 약자들의 디지털화 혜택 공유, 디지털 인력 교육, 데이터의 보호와 신뢰, 보안 등 디지털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인식에 대해 논의 및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다.<sup>20)</sup>

2019년 장관회의는 이전 장관회의가 단일한 전체 주제하에 진행된 것과 달리 명확한 주제없이 이뤄졌다. 사실 TF회의 초반에는 의장국이 Society 5.0을 전체 테마로 추진하였으나, 회원국들의 반응이 여의치 않아 전체 주제는 생략하고 세부 세션주제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sup>21)</sup> 또한, 이전 장관회의에 비해 줄어든 1개의 부속서만을 채택하였다. 이전 장관회의 의장국들은 회원국들의 다양한 관심사항을 선언문 본문에 담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혀,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부속서에 세부 및 추가 이슈를 담는 방식을 취했던 것인데, 금번 의장국은 보안, 지속가능개발 액션플랜 등을 계획하였으나 이것도 회원국의 강한 반대로 대폭 삭제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G20 참석국가 장관관 수석대표들의 본회의 발표에서의 화두는 TF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데이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G20 회원국들은 국가간 데이터의 이동을 통한 거래 및 산업의 활성화, 나아가 디지털경제의 증진과 경제 발전을 공통적으로 주창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이를 문제없이 활용하기 위해서 보안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19) 2019년 G20 무역 및 디지털경제 장관회의 결과.

20) 과기정통부 보도자료(2019.6.9일자)

21) 2019년 장관회의는 전체 주제는 없었으나, 사실상 제시된 핵심 테마는 선언문 개요 부분에 포함된 Society 5.0이라고 할 수 있다.

의견을 같이했다. 또 하나의 주된 이슈는 AI의 활용이었다. 각국 수석대표들은 AI 의사의 진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기술 활용의 혜택, AI 관련 이니셔티브 및 윤리적 이슈를 포함한 정책 사례와 담당 부처 설명, 역량강화를 위한 AI 및 알고리즘 교육 시행, AI 활용 개선 방안에 대한 국가 로드맵 수립 내용 등을 소개하였다.<sup>22)</sup>

〈표 2〉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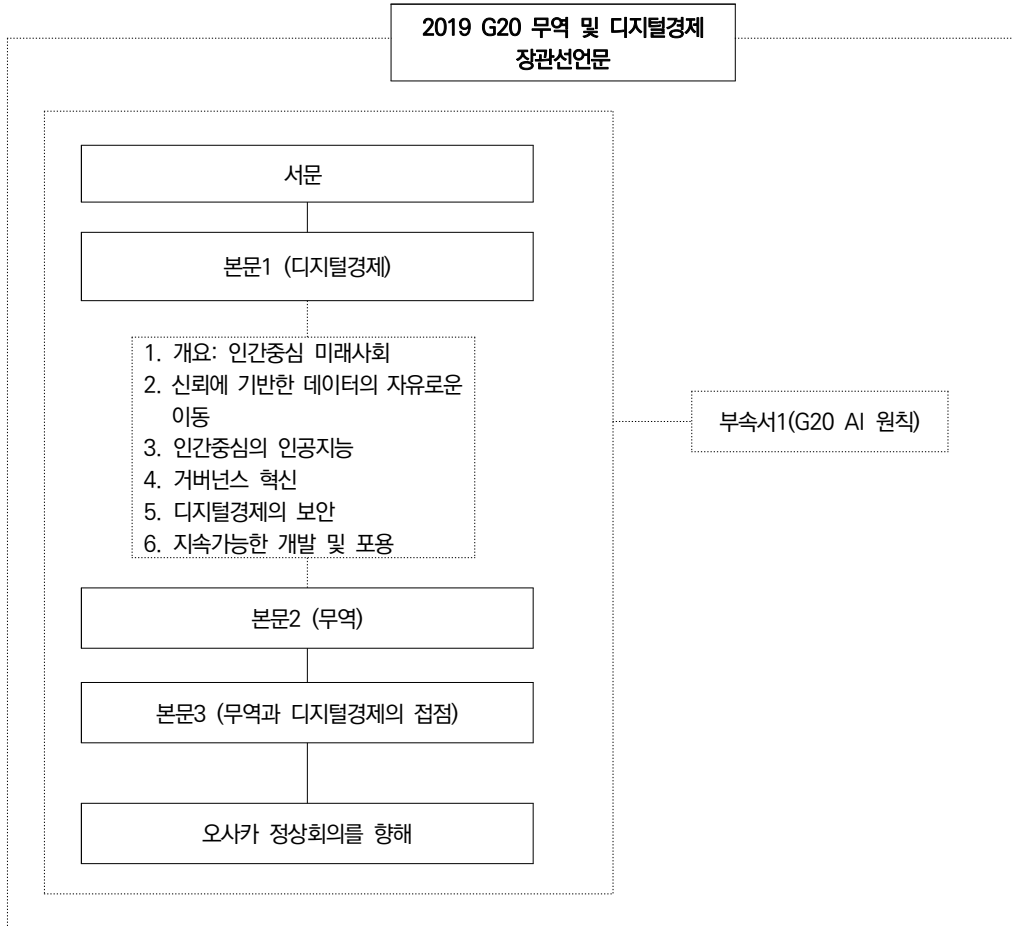
	일정/개최지	정식명칭	전체 주제	결과물
1차	2017.4.6.~4.7 독일 뒤셀도르프	디지털경제 장관회의 (G20 Digital Economy Ministerial Conference)	‘상호 연결된 세계를 위한 디지털화 구현(Shaping Digitalisation for an Interconnected World)’	G20 디지털경제 장관선언문 (+부속서3(디지털경제를 위한 로드맵, 디지털스킬, 디지털교역))
2차	2018.8.23~8.24 아르헨티나 살타	디지털경제 장관회의 (G20 Digital Economy Ministerial Meeting)	‘개발을 위한 디지털 어젠다(A Digital Agenda for Development)’	G20 디지털경제 장관선언문 (+부속서4(G20 디지털정부 원칙, 디지털젠더격차 해소, 디지털경제 측정, 개발을 위한 디지털인프라 확충))
3차	2019.6.8.~6.9 일본 츠쿠바	무역 및 디지털경제 장관 회의 (G20 Ministerial Meeting on Trade and Digital Economy)	-	G20 무역 및 디지털경제 장관선언문 (+부속서1(G20 AI원칙))

자료: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 결과 재정리

장관회의를 통해 합의 및 채택된 츠쿠바 장관선언문은 이전 장관회의의 장관선언문과 달리 무역 부분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선언문의 구조가 다른 형태를 띤다. 장관선언문은 전체의 도입 부분인 서문, 5개 주제분야를 담은 디지털경제 부분의 본문1, 4개 주제분야를 담은 무역 부분의 본문2, 그리고 무역과 디지털 경제 간의 접점을 담은 본문3 및 정상 회의를 향한 계획 부분 그리고 G20 AI원칙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22) 2019년 G20 무역 및 디지털경제 장관회의 결과.

[그림 1] G20 디지털경제 장관선언문의 구조



자료: 2019 G20 장관선언문 재구성

## 2. 장관선언문 세부내용

### 가. 서문

장관선언문 서문의 시작은 선언문의 목적과 선언문에 합의하는 무역 및 디지털경제 분야 장관과 참가국을 명시하고 있다.<sup>23)</sup> 그리고 장관회의의 논의 내용에 대한 개요와 그

23) 참가 국가 및 국제기구 : G20 회원국, 초청국 칠레(2019 APEC 주최국), 이집트(아프리카 연맹 대표),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국제 무역 및 투자는 성장, 생산성, 혁신, 일자리 창출 및 개발의 중요한 동력으로 지속되어야 하며,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이 지속적으로 거대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도전과제도 발생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성장을 위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행동이 필요하고, 국가의 수요, 우선사항 및 환경을 고려하여 무역 및 투자와 더불어 디지털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술의 변혁 및 글로벌화의 혜택을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글로벌 사회의 실현을 향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음을 밝히고 있다.<sup>24)</sup>

#### 나. 본문1

선언문의 핵심내용을 담고있는 본문 부분은 디지털경제, 무역, 디지털경제와 무역의 접점 등 3개 파트로 구분하여, 디지털경제와 무역 분야 각각의 세부 이슈를 다룬 후 무역과 디지털경제 간의 상관관계와 글로벌 경제에서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본문 1에서는 개요와 함께 의장국이 중점을 두고 회원국들이 합의한 5개 세부이슈를 담고 있다. 개요(overview) 부분은 사실 이전 장관회의 선언문의 서문(preamble)과 같은 역할을 한다. 특히, 개요에 ‘인간중심의 미래사회(Human-centered Future Society)’라는 부제를 달아, 의장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장관회의 전체 주제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술한 것처럼 이전 장관회의에서는 전체 주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해 선언문을 전개했으나, 이번 회의에서는 전체 주제 없이 본문의 첫 부분에 주제를 넣은 것으로 보여진다. 무역과 디지털경제 공동선언문의 성격을 가지면서 택한 일종의 대안적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개요 파트는 우선 2016년 항저우에서 시작된 디지털경제 정책 논의와 2017년 독일 장관회의의 중점사항, 2018년 아르헨티나 장관회의의 초점 등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기반하여 2019년 일본 장관회의는 일본 정부가 강조하는 Society 5.0으로 발표된 인간중심의 미래 사회 개념을 공유한다는 이른바 캐치프레이즈를 제시하고 있다. Society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세네갈(NEPAD 대표), 싱가포르, 스페인 및 베트남 등), 국제기구 (APT, ERIA, IMF, ITC, ITU, OECD, UNCTAD, World Bank, WTO)

24) G20 Ministerial Statement on Trade and Digital Economy, para.1~6.

5.0은 발전된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마련한 인간중심 미래사회의 비전으로, 물리적 세계와 가상 세계의 융합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SDGs)을 향해 발전해 나갈 것으로써,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러한 미래사회에서 인공지능, 5세대 모바일 통신기술(5G), 사물인터넷, 분산원장기술(예:블록체인) 등 신기술 활용을 통해 생산성이 증대됨으로써 발생하는 혜택은 개인과 기업의 복지 및 포용 확대로 연결될 것이나, 동시에 디지털 격차 등 우려사항과 과제가 존재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뢰 증진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자유롭고, 안전한, 오픈 인터넷의 증진과 함께 극단주의자와 테러리스트에 대응하여 해결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 및 사회의 디지털화로 인한 혜택을 극대화 및 공유하기 위해 국가 경험 및 국제 정책을 공유 및 증진할 것을 약속하면서, 협력 노력이 필요한 5개 세부이슈를 본문 중심에서 논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sup>25)</sup> 세부이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이동(Data Free Flow with Trust): 국경간 데이터, 정보, 아이디어 및 지식의 이동이 생산성, 혁신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확대함과 동시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도 인식한다.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호, 지적권 및 보안과 관련된 과제의 지속적 해결을 통해,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및 기업의 신뢰를 강화한다. 신뢰 구축 및 데이터의 자유이동 촉진을 위해 국내 및 국제적인 법규 프레임워크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며, 다양한 프레임워크의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해 협력하고, 발전을 위한 데이터의 역할을 확인한다.<sup>26)</sup>

2) 인간중심 인공지능(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G20은 디지털 기업가정신, 연구 및 개발, 디지털 분야 스타트업 확대 및 중소기업의 AI 채택에 초점을 맞춰, 혁신과 투자를 증진하는 인간 중심의 AI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포용

25) G20 Ministerial Statement on Trade and Digital Economy, para.7~14.

26) G20 Ministerial Statement on Trade and Digital Economy, para.15~16.

적 경제성장 증진, 개인의 권한 강화, SDG 진전 등 AI의 책임있는 사용이 주는 혜택과 그로인한 인간중심의 미래 사회 실현을 위한 잠재력 창출과 함께, AI가 노동시장의 전환 현상, 프라이버시, 보안, 윤리적 이슈, 새로운 디지털 격차 및 AI 역량 구축의 필요성 등을 포함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특히, OECD AI 권고안을 인용하여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한 개발 및 복지’, ‘인간중심의 가치 및 공정성’,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 ‘견고성, 보안 및 안전’, 그리고 ‘책임성’ 등의 원칙을 포함한 G20 AI 원칙에 따라, AI에 대해 인간중심적으로 접근하기로 약속한다. 인간중심 AI 추구시, G20 회원국은 적용가능한 프레임워크에 부합하는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의 보호를 지속적으로 증진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AI 역량 구축 및 스킬 개발을 증진할 필요성을 인식한다.<sup>27)</sup>

3) 거버넌스 혁신(Governance Innovation): 디지털 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혁신 친화적인 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혁신에 대한 장애요인 철폐에 주목하며,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통해 좀더 유연하고, 전체적이며, 민첩한 정책 접근을 위한 조치가 포용적 발전에 기여함을 인식한다. 디지털 시대의 거버넌스는 법적 확실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혁신 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혁신적일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더 나은 정책 접근 적용 및 기술 혁신에 대한 가이드를 위해 2018년 장관회의시 합의한 G20 디지털 지식공유 저장소 활용을 포함하여 G20 회원국 간 모범 사례 공유를 지지한다.<sup>28)</sup>

4) 디지털경제의 보안(Security in the Digital Economy): 디지털 경제의 보안은 디지털 기술 및 디지털 경제 전반에 걸쳐 대중의 신뢰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보안의 격차 및 취약성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타 이해관계자의 각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현지화된 국내 맞춤형 프레임워크 및 방법론의 개발 필요성과 함께 디지털 경제에서 보안의 글로벌 측면을 인식하고, 공개성, 투명성 및 합의 원칙에 기반하여 개발된 시장 주도의

27) G20 Ministerial Statement on Trade and Digital Economy, para.17~20.

28) G20 Ministerial Statement on Trade and Digital Economy, para.21~24.

글로벌 기술 표준이 상호운용성 증진에 유용하며,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혜택 실현에 필수요소인 신뢰를 증진함을 주목한다. 보안 관련 이슈를 심층 논의하기 위한 관련 국제기구가 기존의 의무사항 범위 안에서 디지털 경제의 보안에 대해 진행하는 작업에 대해 주목한다.<sup>29)</sup>

5) 지속가능개발목표 및 포용(SDGs and Inclusion): 첫째, 디지털 인프라와 관련, 연결성 및 브로드밴드 접근 개선이 디지털경제 발전에 필수요건이며 포용적 성장 및 지속가능개발을 실현하는 동력임을 인식하고, 5G 및 기타 초고속 연결 기술 등 디지털 연결 인프라 투자 증진을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를 지지하고, 모든 사람이 2025년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편적인 인터넷 접근을 실현한다는 G20 목표와 격오지 연결성 증진을 장려한다. 둘째, 디지털 문해력과 관련, 취약계층 및 노동시장 변혁을 위해 디지털 문해력 개선 전략을 촉진할 것을 장려한다. 셋째, 여성 및 소녀의 디지털경제 참여가 경제성장, 혁신 및 포용을 지지하고 사회적 복지를 개선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여성에 대한 온라인 상 폭력적 태도 해결, STEM의 여성 참여 개선, 디지털 비즈니스의 여성 기업가 지원, 성별 분리 통계 측정 및 추적을 위한 프레임워크, 여성의 디지털 네트워크 접근 확대를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등을 통해, 디지털 젠더 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장려한다. 넷째, 중소기업 및 기업이 포용과 관련, SME 및 기업가들이 혁신 및 디지털경제의 중요한 동력임을 인식하고, SME의 디지털경제 참여 촉진 및 디지털 기업가정신 증진과 확대에 관한 사례를 교환 및 공유하기로 한다. 다섯째, 노년층 및 장애인을 위한 포용적 설계와 관련, 사용자 친화적이고 인간중심적인 디지털 기술을 디지털 역량 수준이 낮은 계층에 사용하여 이들의 포용을 개선한다. 여섯째, 산업의 디지털 변혁과 관련, 제조업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질 높은 포용적 발전 증진을 위해 디지털 산업 정책과 관련된 모범사례 및 경험 공유,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일곱째, 스마트 시티와 관련, 도시 지역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G20은 스마트 시티 개발을 위해

29) G20 Ministerial Statement on Trade and Digital Economy, para.25~27.

도시간 경험 공유 및 네트워킹을 장려한다. 아홉째, SDG를 위한 액션플랜과 관련, 지속가능한 개발 2030 어젠다에 관한 G20 액션플랜의 이행에 기여하고 디지털화의 혜택을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G20 디지털 지식공유 저장소를 활용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 교훈 및 모범 사례 공유에 힘쓴다.<sup>30)</sup>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way forward)에서는 모범 사례 및 경험 공유시 모든 담당자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의 중요성, 즉 G20 관계그룹 및 기타 민간 사회그룹의 역할 및 기여와 국제기구 전문가의 G20 DETF의 작업에 대한 기여를 강조 및 환영하고 있다.<sup>31)</sup>

#### 다. 본문2, 본문3 및 결론

본문2는 ‘무역’ 파트의 세부이슈를 담았고<sup>32)</sup>, 본문3에서는 무역과 디지털경제 간의 ‘접점(interface)’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즉, 디지털화가 무역 및 상거래를 포함한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확대를 인식하고 무역과 디지털경제 간 접점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후,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의 개념, 전자상거래 관련 WTO 논의, 역량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sup>33)</sup>

결론 부분은 제목을 ‘오사카 정상회의를 향하여’라고 정하여, 동 장관회의에서 논의한 무역 및 디지털 경제의 G20 협력 강화 내용이 오사카 정상회의에서도 고려 및 반영되기를 권고하고 있다.<sup>34)</sup>

30) G20 Ministerial Statement on Trade and Digital Economy, para.28~37.

31) G20 Ministerial Statement on Trade and Digital Economy, para.38~39.

32) 1)무역 발전에 관한 대화, 2)시장 주도의 투자 결정 증진을 위한 건전한 비즈니스 환경, 3)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무역 및 투자 증진, 4)WTO 개혁 및 양자와 지역 무역협정에서의 최근 발전사항 등에 대한 논의결과를 정리해놓고 있다. 무역 파트의 자세한 내용은 본 고에서는 생략한다.

33) G20 Ministerial Statement on Trade and Digital Economy, para.64~65.

34) G20 Ministerial Statement on Trade and Digital Economy, prar.66.



## 라. 부속서

2019 G20 장관회의에서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TF회의에서 계획되었던 다른 부속서들이 회원국들의 반대 및 논의 과정에서 채택되지 못하고, G20 AI 원칙(G20 AI Principles) 부속서만을 채택하였다. 동 부속서는 신뢰할만한 AI의 책임있는 관리를 위한 원칙과 신뢰성 있는 AI를 위한 국가 정책 및 국제협력 섹션으로 구분하여 동 내용을 주목하고 있다.

- 1) 신뢰 가능한 AI의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한 원칙: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발전 및 복지 촉진, 인간 중심적 가치 및 공정성 존중,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견고성, 보안성 및 안전성, 책임성<sup>35)</sup>
- 2) 신뢰 가능한 AI를 위한 국가 정책과 국제협력: AI 연구개발에 투자 장려, AI를 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 증진, AI에 우호적인 정책 환경 조성, 인적역량 강화 및 노동시장 변화 준비, 신뢰 가능한 AI를 위한 국제협력<sup>36)</sup>

동 부속서 내용을 살펴보면, 선언문 본문에도 ‘인용했다(drawn from)’고 언급한 것처럼 OECD AI권고안<sup>37)</sup>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답았다. OECD 권고안에서 명시한 일반원칙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및 복지, 인간중심의 가치 및 공정성,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 견고성 및 안정, 책임성 등이다. 이는 G20의 AI 원칙에서 거의 그대로 수용되었다. 또한 OECD 권고안에 담긴 AI 정책노력인 AI 연구 및 개발 투자, △AI를 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 AI 정책 환경 조성, 인적 역량 구축 및 일자리 전환 대비 등도 G20 AI 원칙에 온전히 반영되었다.

35) G20 Ministerial Statement on Trade and Digital Economy, Annex para.1.1~1.5.

36) G20 Ministerial Statement on Trade and Digital Economy Annex para.2.1~2.5.

37)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는 2017년 AI에 관한 논의를 시작 및 2018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한 후, '19년 2월까지 4차례의 AI 전문가포럼 논의를 통해 올해 5월 AI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안(OECD Council Recommenda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을 채택함. OECD Going Digital 홈페이지.

2019 장관선언문은 일본이 최근 발표한 자국 정책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다. 올해 3월 발표한 AI 전략 2019는 AI를 통해 보다 포괄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국가적 비전인 Society5.0 실현, SDGs 기여, 국가적 과제 극복, 산업경쟁력 향상 등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것을 구상하고 있다. 산업경쟁력 향상에 지역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시티 구축이 포함되었으며, 그밖에 AI 핵심 공통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 정비, 디지털정부 구현, 인공지능 국제협력 등 세부 추진전략이 포함되었다.<sup>38)</sup> 일본은 이러한 국내 정책 추진에 기반하여 의장국으로서 개요(Society 5.0으로 실현되는 인간중심의 미래사회), 데이터 이동, 인간중심 AI, 디지털 정부와 거버넌스 혁신, SDG와 스마트시티 등을 선언문의 개별 세션으로 추진해나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 IV.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 주요 이슈 및 쟁점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는 2017년부터 3년간 디지털화와 포용적 성장, 디지털 신기술 활용을 통한 생산의 디지털화, 보안 및 신뢰, 디지털 정부와 혁신, 디지털 인프라 개선, 중소기업과 여성 역량 지원, 소비자 보호, 데이터 이동, 측정, 고용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회원국간 논의를 통해 결과물을 도출해왔다. 이와 관련 공통적인 쟁점을 선별해 연도별로 국가들의 논쟁 및 논의결과를 비교해본다.

38) AI戰略實行會議(2019), 유재홍(2019),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9) 참조.

〈표 3〉 디지털경제 장관선언문 핵심내용 비교

2019 초쿠바 장관선언문	2018 살타 장관선언문	2017 뒤셀도르프 장관선언문
(서문)	(서문)	(서문)
(본문1-디지털경제)	(본문)	(본문)
인간중심의 미래 사회	G20 디지털정부 원칙	글로벌 디지털화-포용적 성장 및 고용을 위한 잠재력 활용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디지털젠더 격차 해소 - 영향력 확산	성장을 위한 생산의 디지털화
인간중심의 인공지능	디지털경제 측정	
거버넌스 혁신 - 디지털경제의 민첩하고 유연한 정책 접근	발전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촉진	디지털세계의 신뢰 강화
디지털경제의 보안	새로운 디지털 기술	
지속가능개발목표 및 포용	디지털세계의 기업가 및 중소기업	향후 계획
향후 계획	노동의 미래	
	소비자 보호	
(본문2-무역)	향후 계획	
(본문3-무역과 디지털경제의 접점)		
(정상회의를 향해)		

자료: 2017-19 G20 장관선언문 재정리

## 1.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정보(information) 또는 데이터(data)의 자유로운 이동(free flow)은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의 대표적인 쟁점사항이다. 2017년 독일 뒤셀도르프 장관회의, 그리고 이번 장관회의에서도 정보와 데이터의 개념 정의와 그 범위에 대해 회원국간 이견이 TF회의 동안 지속되었다. 2017년 TF회의에서 미국은 인터넷서비스 기업의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국경간 정보의 자유 이동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러시아는 ‘국제법에 부합하는’ 이동이라는 조건, 중국은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이라는 조건 등 법적 규제들을 통해 보호하려는 입장이 대립되어, 결국 국내 및 국제법적 프레임워크를 존중한다는 문장을 추가하여 균형을 맞춰 합의된 바 있다.<sup>39)</sup> 한편, 2018년 살타 장관회의에서는 의장국 아르헨티

39) 김성웅(2017), p 22.

나가 국경간 데이터/정보의 이동과 같이 회원국들간 의견 대립이 있는 의제들을 제외 또는 최소화하여 회원국간 합의 도출에 노력하여 큰 대립은 없었다.<sup>40)</sup> 그러나, 올해 츠쿠바 장관회의에서 일본은 처음 TF회의 때부터 신뢰에 기반한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별도 세션으로 제안하여 2017년의 대립적인 각의 재현을 예고하였다. 즉, 국경간의 이동 특히 자유로운 이동 문제는 데이터 및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 수준이 높은 국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문구일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을 통한 산업 발전의 이익이 큰 국가와의 입장 차이가 꽤 컸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차 TF회의에서 러시아, 중국, 이탈리아, 프랑스, 에스토니아 등은 개인정보와 비개인정보 구분의 유용성 문제와 데이터 분류 문제에 우려를 표하고, 러시아, 중국 등은 자국 법규와 관행하에 다양한 데이터 체계를 운영하고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 국가특수적(nation specific)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인도는 데이터의 법적 주권을 강조한 반면, 미국은 국경간 데이터의 자유이동은 국가 경제에 매우 중요하며 신뢰 증진도 중요하나 제한된 정보는 SME에 진입 제한으로 작용하는 등 프라이버시, 산업, 경쟁 정책 등을 포함해서 데이터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41)</sup> 또한 3차 TF회의에서는 러시아는 ‘안전한(secure)’ 데이터 이동 추가, 중국은 데이터의 ‘합법적(legitimate)’ 사용, 인도네시아, 인도, 남아공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보다 기존 장관선언문에서 합의된 표현인 ‘정보, 아이디어 및 지식(information, ideas and knowledge)’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자구를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GDPR을 통해 데이터의 보호장치를 마련한 EU 및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이탈리아 등은 개별 국가의 프레임워크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서 ‘적용 가능한 법적 프레임워크(applicable legal framework)’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미국은 적용가능한 법적 틀은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므로 선언문이 구체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동 표현에 대해 반대하였다. 결국, 절충하여 ‘신뢰 구축 및 데이터의 자유이동 촉진을 위해, 국내 및 국제적인 법규 프레임워크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표현으로 합의하였다.<sup>42)</sup> 빅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플랫폼과

40) 2018 G20 디지털경제 TF회의 결과.

41) 2019 G20 디지털경제 TF 2차회의 결과.

42) 2019 G20 디지털경제 TF 3차회의 결과.

AI 시대에 국가들은 온라인을 통해 이동하는 데이터에 대한 보호의 정도, 기업의 활용 범위와 그 이익 및 우려 등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동 이슈는 앞으로도 G20 디지털경제 논의에서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2. 디지털격차 해소 및 포용

다른 의제에 비해 소외계층의 디지털격차 해소 및 중소기업 지원 등 포용적 발전은 회원국간 별다른 이견이 없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G20 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 사회, 경제, 정치적 측면에서의 포용성은 이미 글로벌 공통의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G20 논의에서 포용성은 의장국별로 중점을 둔 분야나 강조하고자 하는 수혜계층이 달랐고, 회원국들도 자국 정책상 강조 포인트가 조금씩 구별되는 특징을 보였다. 예를 들면, 2017년 뒤셀도르프 장관선언문은 포용이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언급될 만큼<sup>43)</sup> 포용적 성장과 발전에 대한 강조기조를 선언문 전반에서 유지하고 있다. 개별 단락에서는 연결성 측면에서의 사회 약자층과 빈곤계층의 디지털격차 해소(6번 단락), 역량개발 및 적용, 사회정책 및 고용의 질 분야에서 디지털 문해력 향상 및 스킬 증진(18번 단락), 여성의 동등한 디지털경제 참여를 지원하는 디지털 젠더격차 해소(19번 단락), 디지털무역을 통한 포용적 성장(20번 단락) 등을 명시하였다.<sup>44)</sup>

2018년 살타 장관선언문의 경우, 젠더 평등에 대한 아르헨티나 의장국의 강조에 따라 디지털 젠더격차 해소가 단일 세션으로 선언문에 들어갔다. 여성을 디지털경제로 통합하는 것이 더 높은 경제성장 및 포용성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정책 차원에서 실현가능한 조치와 노력을 아래와 같이 세부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디지털젠더 격차 및 다양성이 제공하는 혜택에 대한 인식 제고, △디지털젠더 격차를 좁히기 위해 달성 시한이 정해져있는 목표 설정, 금융 및 국내·지역·글로벌 시장으로의 접근성에 대한 젠더 격차 해소, △디지털변화에 여성의 참여를 저해하는 장벽을 철폐함과

43) 선언문 전체적으로 포용이 20번 언급됨

44) G20 Digital Economy Declaration(7 April 2017), para.6, 18, 19, 20.

동시에 STEM 및 첨단기술 분야에 여성의 참여 확대, △분야별·직업별 젠더 차별 패턴으로 인해 여성에게 미치는 기술의 영향력,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quality jobs)에 대한 접근성 및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 개발 지원, △디지털 비즈니스에 대한 여성의 기업가 정신 지원, △소녀 및 여성들에게 신뢰받는 온라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한 사이버 폭력 해결, △상기 노력의 진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성별 데이터 수집 촉진 등.<sup>45)</sup>

2019년 츠쿠바 장관선언문은 이러한 기존 장관회의의 강조사항을 지속함과 동시에 좀 더 세부적인 이슈도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다. 즉, 포용 섹션을 별도로 마련하여 디지털 문해력 등 디지털 격차를 위한 적절한 역량 배양을 촉진하고,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대표적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조하였다. 이는 세계 최대 고령화 사회인 일본이 직면한 국내상황을 고려한 것으로<sup>46)</sup>, 일본은 노인들을 위한 의료기술의 인터페이스 활용 등 매우 세부적인 조치까지도 선언문에 포함시킴으로써 G20을 국내적으로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sup>47)</sup> 특히,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포용 섹션에 포함시켰는데, TF회의의 논의과정에서 몇몇 회원국의 이견이 있었음에도 이를 끝까지 고수한 것은 향후 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공간인 도시지역에서의 디지털화와 이에 따른 격차 발생을 사전적으로 해결하려는 목적을 정책적으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sup>48)</sup>

45) G20 Digital Economy Ministerial Declaration(24 Aug 2018), p 3.

46) 일본은 2006년 초고령 사회(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 21%이상)에 처음 진입한 이후 2017년 27.8%를 기록하며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7), pp.3~6.

47) 일본은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대비해 2015년 11월 '일역총활약 국민회의'를 통해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고령화 부분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공급 확보를 위한 기관 정비 및 인력 확보 종합대책, 예방에 초점을 맞춘 보건의료체계 개혁 등을 추진. 이윤경(2018), pp.14~15.

48) 일본은 지방이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로인해 고령자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 문제(교통사고), 지방문제(지방서비스 부족)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을 스마트시티로 탈바꿈해 고령자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 및 지방 소멸 문제를 스마트시티 구축 시도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중. KOTRA(2019).

### 3. 신기술 활용

디지털경제에 있어서 신기술은 디지털화를 가속화시키는 추동요인임과 동시에 국가들에게 정책적인 지원의 효용을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는 국가별로 핵심적으로 도입, 추진 및 지원하는 산업분야가 다르고 기술발전의 수준과 속도 및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G20이라는 선진국 모임 내에서도 그 정책적 무게중심이 다를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디지털화로 인한 ‘4차 산업혁명 사회’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일부 국가는<sup>49)</sup> 용어 개념의 보편화가 부족하다는 근거로 반대한 바가 있으며, 현대 산업화 발전의 정도를 나타내는 economy 4.0, industry 4.0도 장관선언문별로 다르게 쓰이고 있다. 예를들어, 2017년 1차 TF회의에서 의장국 독일은 industry 4.0을 주요 정책 제안사항으로 제시하였으나 추후 논의과정에서 용어 표현은 생략되고 생산의 디지털화에 해당 내용을 녹이는데 그쳤다.<sup>50)</sup> 2018년 1차 TF회의에서 의장국은 Industry 4.0을 세션 주제로 제안하고, 2차 TF회의에서는 이를 Economy 4.0으로 변경하였으나, 미국, 캐나다 등은 뜻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사용을 반대하여 선언문 최종본에는 삭제가 되고 새로운 디지털 기술 세션과 디지털세계의 기업가 및 중소기업 세션으로 내용이 분산되어 정리되었다.<sup>51)</sup> 올해 장관 선언문에서는 Society 5.0에 대해 일부 국가들이 반대하였으나 의장국 일본이 강하게 추진하여 서문 파트에 들어갔다.

무엇보다 주목할만한 것은 인공지능,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5G),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새로운 디지털기술에 대한 국가들의 수용적 차이이다.<sup>52)</sup> 인공지능의 경우 2017년 독일 장관회의에서는 TF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고<sup>53)</sup> 장관선언문에도 신기술 활용에 포함되지도 않았으나, 2018년 아르헨티나 장관회의에서 신기술로 인한 혜택의 중요성을 강조

49) 2017년 장관선언문 논의에서 러시아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용어가 아니며, 4차의 기점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동 용어의 삽입을 반대한 바 있음. 2017 G20 디지털경제TF 결과.

50) 2017 G20 디지털경제 TF 1차회의 결과.

51) 2018 G20 디지털경제 TF회의 결과.

52)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은 3년간의 장관회의에서 한두번 정도 언급되는데 그쳤다.

53) 2017 G20 디지털경제 TF회의 결과.

하면서 처음으로 언급되었으며, 2019년 일본 장관회의에서야 인간중심의 인공지능이라는 별도 섹션에서 더욱 강조 되었다. 이는 주요 국가들이 최근 국내 정책상 인공지능을 국가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미국, 한국, 캐나다<sup>54)</sup> 등은 AI 관련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표 또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OECD가 올해 상반기 AI원칙을 담은 이사회 권고안을 마련하는 등 AI가 디지털 미래사회의 핵심 기술이라는 점을 모두가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5G로 대변되는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도 G20 장관선언문에 꾸준히 포함되어 왔다. 물론 한국을 위시한 5G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몇몇 국가들의 강조를 통해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G20 디지털경제 논의에서 회원국들 및 옵저버들은 디지털경제 발전, 디지털격차 해소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연결성 개선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접근으로 표현될 수 있는 디지털 기회와 그로인한 디지털 역량 배양, 디지털 문해력 개선 등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실현 가능하며, 중소기업과 산업 전반, 스마트 시티 등 스마트 사회 전체적으로 5G를 통한 디지털 연결성이 기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2017년 장관선언문에서 G20 회원국은 서로 다른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5G 및 기타 진보적인 통신 기술의 개발 및 보급 투자를 위한 활동 촉진과 조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 제고 증진을 강조하였다.<sup>55)</sup> 2018년 장관선언문에서는 5G를 포함하여 디지털 연결성 인프라에 대한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는 등 국가적 상황을 고려하여 연결성 및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지불능력(affordability), 품질, 보안을 강화하고, 디지털경제 성장에 대한 접근을 증대시키는 적절한 정책 접근방식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특히 2025년까지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의 인터넷 접근

54) 일본은 'AI전략 2019', 미국은 'American AI 이니셔티브', 한국은 'AI R&D 전략' 및 '국가AI전략(예정)', 캐나다는 'Pan Canadian AI 전략', 중국은 '차세대 AI 발전계획' 등을 발표 및 추진 중. 상기 국가들의 AI 정책내용은 AI戰略實行會議(2019), 유재홍(2019), Tim Dutton(2018), 김규리(2019) 참고.

55) G20 Digital Economy Ministerial Declaration(7 April 2017), para.17.



성을 증진한다는 구체적인 연결성 목표도 명시하였다.<sup>56)</sup> 2019년에는 비록 별도의 연결성 섹션이 사라지고 포용성 섹션에 한 단락으로 포함되는데 그쳤지만, 5G 및 기타 초고속 연결 기술, 광섬유 인프라 확대 및 연결성을 포함한 디지털 연결 인프라 투자 증진을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는 등 차세대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었으며,<sup>57)</sup> 서문 개요 파트에도 사회에 혜택을 주는 신기술의 예로 5G가 포함되었다.<sup>58)</sup>

#### 4. 보안 및 신뢰

보안 문제는 용어자체가 시사하는 의미의 특성상 G20 논의에서도 국가간 의견의 충돌이 많았던 이슈라고 볼 수 있다. 보안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해서도 국가마다 민감하고 첨예한 이슈이지만, 기간산업으로 분류되는 통신 및 디지털 산업의 보안 문제는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언문에 표현되는 용어와 문구에 대해서 국가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제였다.

예를들어, 2017년 TF회의 논의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보안 관련 정부 정책 강화에 대한 국제논의에 대해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은 강조했으나, 미국, 호주는 반대하고 오히려 미국은 ICT 활용 및 상호운용성에 있어 보안 증진을 ‘해야한다(should)’라는 문구를 고위급에서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는 미국 주장에 따라 ‘가능하다(can)’로 수정하고, 안전조치(safeguards)도 조치(measure)로 변경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sup>59)</sup> 2018년까지도 보안 이슈는 소비자 보호, 디지털 정부, 표준, 기업의 보안 등에 있어 이슈별로 강조되어 왔으나<sup>60)</sup>, 2019년 별도의 디지털경제 보안 세션이 마련되어 이러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포괄하였다. 논의 과정에서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들은 사이버보안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으나 이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주장도 상당히 강했으며, 보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56) G20 Digital Economy Ministerial Declaration(24 Aug 2018), p 5.

57) G20 Ministerial Statement on Trade and Digital Economy, para.28.

58) G20 Ministerial Statement on Trade and Digital Economy, para.10.

59) 2017 G20 디지털경제 TF회의 결과.

60) 2018 G20 디지털경제 TF회의 결과.

문제와 관련해서도 디지털 보안이나 사이버 보안이나 아니면 ICT 분야의 보안이나에 대해서도 논쟁이 많았다. 예를들어 미국은 사이버보안이 국경간 데이터 이동 세션에서 논의 되는 것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캐나다와 의견을 같이하여 디지털보안 세션을 사이버 보안 세션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여 의장국 일본이 이를 수용하였으나, 러시아, EU, 스페인, 중국, 브라질, 독일은 기존 디지털경제의 보안 세션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대립각을 세웠다. 러시아는 마지막 TF회의에서 ICT 활용에서의 보안 등으로 입장을 변경하였으나, 결국 다수 회원국 의견에 따라 디지털경제 보안으로 결정된 바 있다. 또한, 디지털보안과 관련한 부속서의 내용이 너무 많다는 다수 회원국의 의견과 부속서의 주요내용을 본문에 넣자는 러시아의 의견이 있어 결국 부속서를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의 대립 이외에 보안 내재화(security by design), 보안 위험관리 및 모범사례 공유 등에 있어서는 모든 회원국들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sup>61)</sup>

## 5. 기타: 디지털 정부 및 혁신, 디지털 무역, 이해관계자 참여 등

거버넌스 혁신 또는 규제 혁신은 디지털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거버넌스 혁신은 디지털 정부라는 용어로 시작하여 데이터를 포함한 거버넌스 혁신의 추구로 진일보해왔다고 할 수 있다. 2018년 장관선언문에서는 G20 디지털정부 원칙이라는 세션 표제하에 유연하고 혁신적이며 통합된 데이터가 주도하는 공공 부문을 촉진할 수 있는 지침으로서, 정부의 효과성 및 성과를 개선하고 디지털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위해 부속서까지 마련하였다. 또한, 디지털정부 발전을 향한 G20 회원국의 진보를 인정하며, 더 개방적이고, 효율적이며, 책임있고, 투명하며, 사용자 친화적이며, 포용적인 정부를 조성하고, 관련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 및 정보 습득을 통한 혜택을 장려하였다.<sup>62)</sup> 2019년 장관선언문은 이를 좀더 폭넓고 구체화하여 표현하였는 바, 정책 수립시 신기술의 잠재력 활용을 위해

61) 2019 G20 디지털경제 TF회의 결과.

62) G20 Digital Economy Ministerial Declaration(24 Aug 2018), pp.2~3.

혁신에 대한 장애요인 철폐를 강조하고 구체적인 사례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유연하고, 전체적이며 민첩한 정책 접근과 거버넌스를 중시하였으며, 상호운용가능한 표준, 프레임워크 및 규제 협력의 유용성을 환기하였다.

한편, 디지털 무역은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핵심 산업으로 비유될 수 있고 G20 디지털 경제 논의의 존재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주제로, 2017년 장관회의 때부터 꾸준히 강조되어 왔다. 뒤셀도르프 선언문에는 디지털 무역을 위한 역량과 개발수준의 국가간 불균형 인식 및 격차 해소 필요성, 디지털 무역에 대한 측정 개선 노력, WTO 전자상거래 논의의 적극 참여, 포용적 성장과 고용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무역의 잠재력 인식 등이 단일 단락(20번 단락)에서 규정되었고, 2018년 살타 선언문에서는 좀더 나아가 디지털경제와 무역 간 접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디지털경제 TF와 무역 및 투자 작업반(TIWG)과 협업을 적극 요구하는 문구를 담았다<sup>63)</sup>. 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2019년 장관회의 자체가 무역 및 디지털경제 장관회의로 공동 개최되고, 츠쿠바 선언문에서 무역 파트가 선언문 본문에 별도로 들어갔으며, 특히 디지털경제와 무역간의 접점에 대한 강조내용도 본문에 독립되어 포함되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수이해관계자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논의와 관련, 2017년 독일이 장관선언문에 포함될 11개 주요 정책이슈로 다수이해관계자적 접근을 포함시킨 이후로 이해당사자(interested parties)를 주장하는 러시아 측과 이해관계자(stakeholders)로 충분하다는 미국 진영의 대립이 TF회의에서 지속되었고, 결국 의장국 중재로 인터넷 거버넌스의 다수 이해관계자 접근은 2016 항저우회의에서 합의된 대로 선언문 서문에 반영하고, 표준협력 및 국제협력 관련 조항에서는 ‘이해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두 단어를 모두 명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바 있다.<sup>64)</sup> 2018년에는 이해관계자 용어, 협력 및 참여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이, 디지털 역량 구축을 위한 다수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 촉진, 기업가 및 중소기업 발전과 성장을 위한 디지털 생태계 강화에 있어 이해관계자간의 협력 강화 등이

63) G20 Digital Economy Ministerial Declaration(24 Aug 2018), p 7.

64) 김성웅(2017), pp.26~27.

무난하게 선언문에 반영되었다.<sup>65)</sup> 그러나, 2019년 3차 및 4차 TF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UN이나 기타 회의에서 다수 이해관계자 접근(multi-stakeholder approach)이라는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사용하지 말고 거버넌스 혁신 세션에서 고유의 역할을 가진 모든 이해관계자(all stakeholder in their respective role)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제안 및 고수하여, 결국 ‘이해관계자들의 고유 역할 인정(respective roles)’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합의를 이룬바 있다.<sup>66)</sup> 특히 2019년 논의에서는 세부 세션 모든 부분에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협력 강조내용이 들어갔다. 이는 디지털경제 이슈의 주체적 행위자로서의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확대되는 동향을 반영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요컨대, 3년 동안의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와 이에대한 사전회의인 TF회의를 통해 G20 회원국과 옵저버들은 상기한 이슈에 있어 공감하는 주제는 강조하고, 이견이 있는 쟁점은 절충을 통해 합의를 이뤄 선언문이라는 결과물을 생성해왔다. 이를 통해 G20 논의의 흐름을 파악하고 다자외교의 방식과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바, 향후 고려가능한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전략을 발굴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고에서는 2019년 G20 디지털경제장관회의의 결과를 중심으로 장관회의 배경 및 디지털경제TF 추진경과, 장관회의 본회의 논의결과 및 츠쿠바 장관선언문을 분석하고, 지난 3년간 진행된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의 주요쟁점의 흐름을 비교 정리해보았다.

이번 장관회의는 특히 디지털경제 분야의 장관들로만 구성하여 진행한 것에서 진일보하여 무역 분야와의 깊은 연계성을 인식하고 무역 및 디지털경제 분야의 장관들이 공동으로 논의를 하고 선언문을 채택한 특징을 보인 회의였다. 또한, 츠쿠바 선언문은 데이터동, 신기술, 디지털정부와 혁신, 보안, 포용 등 기존 선언문의 주요 분야 및 내용에 기반하

65) G20 Digital Economy Ministerial Statement(24 Aug 2018), p 6.

66) 2019 G20 디지털경제 3차-4차 TF회의 결과.

여, 신뢰에 기반한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 인간중심 인공지능, 거버넌스 혁신, 디지털 보안, 지속가능개발목표 및 포용성 등의 세션 주제를 포괄함으로써 전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들의 2019년 최대 관심사를 한눈에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TF회의 논의 과정에서 보인, 글로벌 전자상거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고려해야할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규제 문제, 디지털 신기술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별 발전 수준의 문제, 디지털무역에 있어서의 규범화 문제 및 상기 모든 이슈에 있어서의 보안에 대한 접근 문제의 차이 등에 관한 논쟁 그리고 관심 의제 반영에 대한 국가들의 싸움은 글로벌 디지털경제의 패권 판도와 향후 흐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단초로 보여진다.

이러한 점을 상기하여 G20 디지털경제 논의와 장관회의 결과가 가지는 시사점과 향후 정책적으로 고려할만한 대응전략을 살펴본다.

우선, G20 내에서의 연계전략이다. 국가들의 관심 정책이슈 및 디지털경제 현황에 대한 파악 후, G20 내에서의 이슈별 강조점을 관련국가와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쟁점 대립과 관련, 국가들의 동향과 의도 파악이 가능하므로 예를들어 5G 전략을 강하게 추진하는 국가, AI전략을 국제협력 차원에서 진행하려는 국가, 우리측 관련 법제방향과 상반되지 않는 국가들과 상호 협조 구도를 사전에 꾸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2020년 사우디가 의장국으로서 G20 논의를 시작하였는 바<sup>67)</sup>, 의장국의 제안 주제(안)를 적극 검토 및 협조하여 정책적 관심사항을 미리 고민하여 투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G20 외에서의 복합전략이다. 국제기구의 논의는 단편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다층적 차원에서 여러 국제기구에서 동시다발적 또는 시간을 두고 연이어 유사한 의제들이 논의된다. 따라서, G20 디지털경제 논의이슈와 연관되는 G20 밖의 국제기구에서 복합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예를들어, 이번 장관선언문에서 OECD AI 권고안을 그대로 인용한 것처럼 G20은 OECD와의 협력이 매우 밀접하며 ITU, WTO와도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측이 강조할 사안을 OECD, ITU에서도 동시에 의제로 받

67) 1차 세르파회의가 12월 예정되어 있으며, 의장국 사우디는 차년도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의 제안주제 초안을 주요국들과 협의하고 있음.

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G20 회원국들이 다른 국제기구에서도 멤버로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해당 국제기구에서 주요 상대국과의 평시 우호관계, 필요시 상호 이익의 교환 등의 국제기구 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다자 차원의 대응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G20 및 다른 주요 국제기구 내에서의 다자 차원의 협력 외교의 중요성을 시사해준다.

반면 세 번째 방안은 양자 차원의 전략이다. 국제기구 외교로 미흡한 부분은 양자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제기구라는 다자협력은 이미 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회원국들 간의 양자 차원의 협력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국과 매년 정기적으로 ICT 정책협의회를 진행하고 있고, 중국, 일본과도 최근 ICT 장관급회의를 재개하였다.<sup>68)</sup> 이 같은 기존 메커니즘 이외에 상호 의제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국가들과 적극적인 양자협력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5G 정책 추진을 위해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가 큰 국가들,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기술의 협력을 추진하는 국가들은 우리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하므로 이런 유형의 국가들과의 정책협력 및 대화기제를 구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 담당자는 정책방향을 잡는데 있어 G20 논의를 필히 참고해야 한다.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고려해볼 때 선진국 및 신흥경제국들의 모임인 G20의 결과물 및 논의과정에서 표출된 국가들의 관심의제와 정책방향은 국민과 기업에 좋은 기회를 제공할 기반이 될 수 있다. 정부 정책의 목표가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에 있는 만큼<sup>69)</sup> 디지털경제 시대에 있어 기업의 대외 먹거리 발굴 및 디지털사회 개인의 복지와 혜택 증대를 위해 G20의 합의사항은 좋은 본보기로 활용할 수 있다.

연구자 입장에서 볼 때 향후 연구방향은 단편적인 동향 파악에 그치지 않고, 심화된 연구를 위한 실천과 노력이 필요하다. G20 참여국가들의 정책과 관심의제의 배경 및 산업적 상황과 실제 정책내용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조사 분석하고, 나아가 그 방향까지 예측할 수 있는 연구역량의 축적과 해안이 필요하다.

68) 전자신문(2018.5.30.일자)

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19.3.7.일자)

## 〈참고문헌〉

- 김규리(2019), “미국 인공지능 관련 최신 정책 동향”, NIA Special Report 2019-6, 2019.
- 김성웅(2017), “2017년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 결과 및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9권 12호 통권 649호, 2017.7.3.
- 유산산(2018), “빠르게 발전하는 중국의 디지털 무역”, 인민화보사 월간지 〈중국〉 2018년 제7호, 2018.
- 유재홍(2019), “일본의 인공지능 전략 동향- AI 전략 2019”. SPRi 월간SW중심사회 2019년 6월호, 2019.
- 이윤경(2018),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대응 방향 모색: 일본 사례의 시사점 검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7), “일본의 고령화 현황 및 고령사회 대책”, 고령친화산업 Report, 2017.
-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9), “일본의 인공지능 정책 동향”, KIAT 산업기술정책브리프, 2019.
- 허난이(2019), “디지털 무역규범의 최근 논의동향과 시사점”, 대한상의 브리프 제105호.
- KOTRA(2019), “일본, 소멸 위기 지방도시가 스마트시티로 변신!”, 일본 도쿄무역관, 2019.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도 업무계획' 발표”, 2019.3.7일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과기정통부 유명민 장관,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강조”, 2019.6.9.일자.
- 전자신문, ICT 이어 과학기술도 한중일 협력채널 복원....하반기 서울서 3국 장관회의 개최, 2018.5.30.일자.
- 2017년 G20 디지털경제 TF회의 결과.
- 2017년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 결과.

- 2018년 G20 디지털경제 TF회의 결과.
- 2018년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 결과.
- 2019년 G20 디지털경제 TF회의 결과.
- 2019년 G20 무역 및 디지털경제 장관회의 결과.

AI戰略實行會議, AI 戰略 2019, 2019.6.

(<https://www.kantei.go.jp/jp/singi/tougou-innovation/pdf/aisenryaku2019.pdf>)

G20 Digital Economy Ministerial Declaration, (7 April 2017).

G20 Digital Economy Ministerial Declaration, (24 Aug 2018).

G20 Ministerial Statement on Trade and Digital Economy, (9 June 2019).

G20 Osaka Leaders' Declaration, (29 June 2019).

UNCTAD, Global e-Commerce sales surged to \$29 trillion, UNCTAD/PRESS  
/PR/2019/007, (29 March 2019).

Tim Dutton, An Overview of National AI Strategies, Medium, (3 Aug 2018).

2017 G20 디지털경제장관회의 홈페이지

(<https://www.bmwi-registrierung.de/G20-Task-Force-Meeting-3/Default.aspx?link=m2109>)

2018 G20 디지털경제장관회의 홈페이지

(<https://qa-g20.argentina.gob.ar/en/g20-argentina/work-streams/digital-economy>)

2019 G20 무역 및 디지털경제장관회의 홈페이지

(<https://www.japan.go.jp/g20japan/>)

([https://www.meti.go.jp/english/press/2019/0610\\_003.html](https://www.meti.go.jp/english/press/2019/0610_003.html))

OECD Going Digital 홈페이지

(<https://www.oecd.org/going-digital/ai/principles/>)